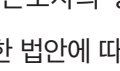


스페인 SPAIN



스페인 정부, 유급 생리휴가제 입법 추진

라세르타,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지난달, 스페인 내각은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에 정부가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생리기간 중 생리통을 겪는 여성 근로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3일, 중증의 통증으로 업무나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5일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유급휴가로,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임금을 부담한다. 정부는 본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만약 법률로 제정 및 시행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2,400만 유로(한화 약 3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전에 도입하게 된 생리휴가제는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인 출산·생식 보건정책 개혁의 일환이다. 즉 이번 재생산 보건정책 개혁안은 출산 및 생식보건 분야에 있어 여러 가지 정책 수정 방향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기존에는 16-17세 미성년자 청소년이 임신한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신중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본 법안에서는 낙태법을 일부 개정하여 앞으로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서가 없이도 임신중지 시술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모든 공공의료시설에서 임신중지 시술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단, 임신중지 시술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한다.

그리고 본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 근로자는 임신 39주부터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이번 스페인 정부의 출산·생식 보건 정책 개혁안은 성차별주의,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전 연령대 학생 대상 성교육 실시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생리대가 필요한 여학생들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배포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속하는 여성인 경우 무료로 생리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생리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자 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일부 반대가 있었다. 생리대 부가가치세율을 4%로 낮추자는 주장도 제기 된 바 있으나 이전에 발표된 법안에서는 우선 현행 10%로 유지한다. 이레네 몬테로(Irene Montero) 평등부장관(Minister of the Ministry of Equality)은 내년 정부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 시기에 이르면 다시 이 문제를 의제로 제기하여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법안에 대해 이사벨 로드리게즈(Isabel Rodríguez) 스페인 정부 대변인은 여성을 위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진일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레네 몬테로(Irene Montero)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생리가 사회적 금기사항도 아닐뿐더러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진통제를 먹거나 아픈 배를 잡고 출근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총리는 본인의 공식 트위터(Twitter) 계정을 통해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은 여성주의적 관점을 적용했으며, 여성은 본인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올레 초, 산체스(Sanchez) 총리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곧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 법안이 의회를 수월하게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올레 초 하원 투표에 앞서 공청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소수연정 내각이 이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의회로부터 충분히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제10당인 보수 성향의 국민당(Popular Party) 역시 정부의 재생산 보건 정책 개혁안 발표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알베르토 누네스 페이호(Alberto Nunez Feijoo) 당대표는 이번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정보당국의 정부 고위 인사 일부를 대상으로 한 휴대폰 도청 의혹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적 시도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노동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양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의 주요 노동조합 중 하나인 스페인노동총연맹(Únion General de Trabajadores, UGT)의 크리스티나 안토냐나스(Cristina Antónanzas) 부대표(Deputy Secretary)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생리휴가제 도입이 장기적으로는 여성이 취업하는데 도리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미 구직 과정에서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가'와 같은, 남성에게는 묻지 않는 질문들을 여성 구직자에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생리기간 중 생리통이 심한 편인가라는 질문까지 추가될 형국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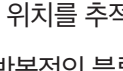
반면 또 다른 노동조합인 스페인 노동자위원회(Comisiones Obreras) 측은 이번 생리휴가제 법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성 근로자가 아파하면서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생리기간 중 겪는 고통을 숨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중 하나는 의사 소견서 의무 제출이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례가 의학적인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앙헬라 로드리게스(Ángela Rodríguez) 평등·반(反)성범죄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quality and against Gender Violence) 역시 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리통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내릴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통증을만 단순히 약간의 불편감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두통, 고열과 같은 의학적 증상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sup>1)</sup>

현재 생리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잠비아 정도에 소수에 그치는 수준이다. 몇 년 전 이웃 국가인 이탈리아도 3일 유급 생리휴가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한 채 소포로 돌아간 바 있다. 이번 스페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에 포함된 생리휴가제는 그 내용과 정부의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본 법안은 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통 수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레 안에 이번 법안이 제정될 확률은 다소 희박하다. 그러나 우선 생리휴가를 법제화하고자 한 스페인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전했으며, 만약 의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될 경우 스페인은 유럽에서 생리휴가제를 도입하는 첫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1) 평등·반(反)성범죄부(Secretariat of State for Equality and against Gender Violence)는 평등부(Ministry of Equality) 산하 부서이다.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스토킹 금지법 논의

김충재 세인트조지스 대학교(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미국 내에서 스토킹은 아주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다. 1990년 캘리포니아(California)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법이 개정된 이래로 현재 미국 내 모든 주(States), 콜롬비아 특별구(the District of Columbia) 일 연방정부에서 스토킹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스토킹 범죄는 "반복적이고 침입적으로 이루어지는 피해자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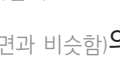
미국 내 전국 친밀한 관계 및 성범죄 설문조사(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를 바탕으로 한 질병관리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보고에 의하면 여성 3명 중 1명, 남성 6명 중 1명이 살면서 스토킹을 경험했으며 그 피해자 중 약 24%의 여성과 19%의 남성이 미성년자일 때 스토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8%의 여성 및 49%의 남성 피해자들이 25세가 되기 전에 스토킹을 경험한다고 밝혔다(CDC, 2022). 미국 사법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와 현재 혹은 전 남편/여자 친구, 현 혹은 전 남편/부인, 친구, 직장 동료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는 7%에 불과하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2). 스토킹을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스토킹은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되는데 최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스토킹이 이슈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애플사의 에어태그(AirTags)를 이용해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있다. 에어태그를 자신의 차 열쇠나 가방 등 부착하면 반복적인 블루투스 신호(Bluetooth signal)를 통해 스마트폰 혹은 다른 애플 제품의 위치에 편승하여 태그의 소유자가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저렴하고 편리한 개인 위치추적장치가 상대방 몰래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해서 나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CNN, 2022).

미국의 공공라디오방송(National Public Radio)과의 인터뷰에서 전자 프론티어 재단(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에바 갈퍼린(Eva Galperin) 사이버보안 디렉터는 "[에어태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순간 걱정을 안 할 수 없었다. 이 제품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을 당하는지에 대한 리프트를 본 이후로 더욱 걱정되기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애플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이는 비단 에어태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어태그와 같은 위치추적 장치는 삼성, 소니와 같은 다른 회사에서도 출시되고 있고 이러한 개인 추적장치는 언제라도 스토킹을 위한 장치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NPR, 2022).

새로운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전자제품을 이용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스토킹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변화하는 기술을 반영한 법 개정 및 수정이다. 와이오밍 공공 라디오방송(Wyoming Public Radio)에 의하면 최근 와이오밍(Wyoming)주는 휴대폰, 아이패드, 컴퓨터 혹은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을 스토킹하는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와이오밍 주에서는 GPS 추적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그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도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와이오밍 주에서는 새롭게 개정될 법을 통해 위치추적장치를 스토킹과 같은 나쁜 행동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된다(Wyoming Public Radio, 2022). 전국주의회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의하면 미국내 현재 알래스카(Alaska), 애리조나(Arizona), 코네티컷(Connecticut), 일리노이(Illinois), 뉴욕(New York) 등 7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the District of Columbia)에서만 위치추적장치 사용금지 조항이 스토킹 법에 포함되어 있다. 와이오밍주에서 이 법이 개정되 되면 미국에서 위치추적장치를 금지하는 8번째 주가 될 것이다. 이 외의 델라웨어(Delaware), 미시간(Michigan), 오리건(Oregon), 텍사스(Texas), 유타(Utah) 등의 주에서는 차 주인의 동의 없이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NCSL, 2022). 그 외의 다른 주들은 아직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스토킹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날로 발전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JAPAN



일본, 정치 분야에서 남녀 공동 참가의 추진에 관한 법률(개정)의 운용

전 여 주 동경대학교대학 법학정치학연구소 박사과정

최근 한국에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렸다. 이번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 55명 중 10명(18.2%)가 여성이었으나, 모두 낙선하였다. 단위를 조금 더 내려도, 여성 기초단체장은 전체 226개 기초 단체장 중 7명(3.1%)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광역의원(14.8%)과 기초의원(25%)에서 여성은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경우는 어떻게, 한국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2019년 17%, 2020년 17.3%, 2021년 19%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이웃나라 일본의 상황을 궁금하게 한다. 2022년 7월 일본에서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참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일본은 국회가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양원제 국가로 의원수는 중의원 465명, 참의원 24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7월에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는 정권의 중간평가와 같은 성격은 지니며 보수여당을 향해 개헌선(2/3)을 확보할 수 있는나에 따라, 일본의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선거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일본 내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상황과,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및 법률의 운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지방의회부터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지방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도도부현(都道府県: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의회에서는 11.5%, 시의회에서는 16.2%, 정촌(町: 일본의 행정구역의 소단위로 우리나라의 읍면과 비슷한)의회에서는 11.3%으로, 지방의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우리나라보다도 적었다.

한편, 국회의원의 경우, 1996년에 일본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된 후, 중의원 의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상승추세에 있으나, 2017년 10월 중의원 총선거 이후 2021년 4월 기준으로 여성의원 비율은 9.9%(46명)를 기록하고 있다. 참의원에서도 여성의원 비율은 상승추세이며, 2019년, 정치 분야의 남녀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2018년 법률 제28호)의 시행 후의 첫 참의원 통상선거 결과 참의원에서의 여성의 비율은 2% 증가하여 2021년 5월 기준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은 중의원에서 17.8%(2017년), 참의원에서 28.1%(2019년)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중의원에서 10.1%(2017년), 참의원에서 22.6%(2019년)을 기록했다.

국회에서 여성의원 수가 적은 경우, 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동경대 마에다 켄타로우 교수의 연구(2019)에 의하면, 2014년 총선거에서의 일본의 유권자와 당선자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주요정책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명확히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부부별성의 문제(결혼 후에 부부가 결혼 전의 각자의 성비를 청하는 것을 법률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성 유권자와 당선자는 남성 유권자와 당선자에 비해 더욱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이와 반대의 경향성(여성 유권자와 당선자가 더욱 반대)이 관찰되었다(前田健太, 2019: 159-163). 이렇듯 성별에 따른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고려한다면, 여성의원 수의 작은 경우 여성의 관심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게 되므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국회 내에서의 여성의원 수의 확보는 중요하다.

이와 함께 마에다 켄타로우 교수는 일본에서의 여성의 정치 참가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이 정치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을 지적하였다. 해당 규범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유권자의 성별과 관련 없이 남성 후보자에 우선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여성 후보자가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경우 정치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고, 반대로 정치가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여성스러움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가진다(前田健太, 2019: 171). 그러나 여성 정치인이 적은 결정적인 이유로는 여성 후보자가 남성 후보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문제가 지적되었다(前田健太, 2019: 174). 여성 후보자가 남성 후보자와 같은 비율로 당선되더라도, 여성 후보자를 남성 후보자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 당선자의 수가 적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2018년 5월 23일에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 공동 참가의 추진에 관한 법률(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 공포 및 시행되면서 해당 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당시의 개정안에는 정당에게 1) 후보자 선정 방법 개선, 2) 후보자가 될 만한 인재 육성, 3) 성희롱, 임신·육아로 인한 눈치를 주거나 불편한 분위기 조성하는 하라스먼트(harassment, ハラスメント) 등에 대한 대책에도 자주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노력을 의무화 하였다. 또한 한국 및 지방 공공단체도 성희롱과 임신 육아로 인한 하라스먼트에의 대응을 비롯한 정책 정비 등의 시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또한 개정법에 따라 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에서는 하라스먼트의 방지를 위한 의회 연수 교재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의 1) 연수 실시 상황, 2) 규정 정비 상황, 3) 상담창구 설치 상황의 조사 및 공표를 통하여 의회의 대응을 촉진해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내용은 2020년 12월 25일에 결정된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마루카와 타마오(丸川珠代) 여성정책담당대신은 정당에 대하여 후보자 중의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수치 목표의 설정이나 적극적 개선 조치 도입 등의 자주적인 대응을 요청하였다. 당시 대신은 자유민주당, 입헌민주당, 공명당, 일본유신당, 일본공산당 등의 9개 정당에 대하여 이러한 요청을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 정당들의 노력이 2022년 5월에 정부 자료를 통해서 공개되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내 여성 비율과 관련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의 후보예정자의 수를 살펴보면, 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후보예정자의 숫자는 6월 15일 기준으로 527명이며, 이 중 여성후보예정자는 175명으로 전체 후보예정자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직전의 선거(2019년)의 경우, 여성의 후보자의 비율이 28%(104명)였던 것과 비교하면, 과거에 비하여 여성의 후보자의 비율 및 숫자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음을 보면 정치 참여 의원의 당선자 수 및 의회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당별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참고해보면, 공명당(21%)과 자민당(23%)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공산당(55%), 입헌민주당(49%), 사회당(42%)이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즉, 높은 의석 수를 지닌 정당들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당들의 의석 수의 분포를 고려한다면 실제로 선거 후 결과는 위의 전망과 달라질 수도 있다.

요컨대, 일본에서의 여성의 낮은 정치 참여율이 여성의 과소대표 현상을 야기한다는 현실 인식으로부터, 여성의 정치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의 제정 및 개정, 또한 구체적인 시책 마련이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여성의원 활동과와는 다르게 일본의 경우는 '노력 의무'에 그쳐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는 있으나, 해당 법률의 목적은 남녀 후보를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합당성에 비해서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른 정부의 요청을 받아 정당 내에서도 여성의 정치 참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본에서의 여성의 정치참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노력을 촉구하는 데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는 참의원 선거에서의 여성 후보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연립정당들에서 여성 후보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주목해서 지켜보아야 하겠다.

참고자료

- Bloomberg(2022.5.17) "Plan to Grant Paid Leave for Period Pain Suffers 'Tensions in Spai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5-17/plan-to-grant-paid-leave-for-period-pain-suffers-tensions-in-spain/#4y7vzkg> (접속일: 2022.6.22).
- Catalan News(2022.5.17) "Spain approves menstrual leave and abortion for over 16s without parental consent bill" <https://www.catalannews.com/highlights/item/spain-approves-menstrual-leave-and-abortion-for-over-16s-without-parental-consent-bill-2> (접속일: 2022.6.22).
- DW(2022.5.17) "Spain: Cabinet approves menstrual leave bill" <https://www.dw.com/en/spain-cabinet-approves-menstrual-leave-bill/a-61830181> (접속일: 2022.6.22).
- Euronews(2022.5.17) "Spain approves plans to become the first European country to introduce paid 'menstrual leave'" <https://www.euronews.com/next/2022/05/17/spain-set-to-become-the-first-european-country-to-introduce-a-3-day-menstrual-leave-for-work> (접속일: 2022.6.22).

참고자료

- CNN(2022.2.10) "Apple plans AirTag updates to curb unwanted tracking" <https://www.cnn.com/2022/02/10/tech/airtag-safety-updates/index.html> (접속일: 2022. 6. 9.).
-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22. 2. 14). "Private Use of Location Tracking Devices: State Statutes" <https://www.ncsl.org/research/telecommunications-and-information-technology/private-use-of-location-tracking-devices-state-statutes.aspx> (접속일: 2022. 6. 9.).
- NPR(2022. 2. 18). "AirTags are being used to track people and cars. Here's what is being done about it." <https://www.npr.org/2022/02/18/1080944193/apple-airtags-theft-stalking-privacy-tech> (접속일: 2022. 6. 9.).
- U.S. Department of Justice(2012. 7. 1). "Stalking victims in the United States- Revised" [https://bjs.ojp.gov/content/pub/pdf/svus\\_rev.pdf](https://bjs.ojp.gov/content/pub/pdf/svus_rev.pdf) (접속일: 2022. 6. 10.).

참고자료

- 동아일보(2022.6.17) "日 참의원 선거 개헌선 사상... 자민당 '과반 목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16/113971040/1> (접속일: 2022.6.22).
- 동아일보(2022.6.22) "日, '정치 약자' 향한 성희롱 막는 '갑질 방지 조례안' 가결"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622/114061414/1> (접속일: 2022.6.23).
- 여성가족부(2021.3.4) "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8](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8) (접속일: 2022.6.22).
- 연합뉴스(2022.6.2) "「6·1 지방선거」 김은태 0.15%p자 역전... 첫 여성 광역단체장 '불발(총합)'" <https://www.yjna.co.kr/view.html?AKR20220602086251001> (접속일: 2022.6.22).
- 衆議院 (2022) "国会の構成"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ais/html/statics/kokkai/kokkai\\_kousei.htm](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ais/html/statics/kokkai/kokkai_kousei.htm) (접속일: 2022.6.22).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2022) "地方議会における女性議員の割合の推移" [https://www.gender.go.jp/about\\_danpo/whitepaper/03/zenta/html/zuhyo/zuhyo01-01-06.html](https://www.gender.go.jp/about_danpo/whitepaper/03/zenta/html/zuhyo/zuhyo01-01-06.html) (접속일: 2022.6.22).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2022) "参議院議員通常選挙における候補者、当選者に占める女性の割合の推移" [https://www.gender.go.jp/about\\_danpo/whitepaper/03/zenta/html/zuhyo/zuhyo01-01-01.html](https://www.gender.go.jp/about_danpo/whitepaper/03/zenta/html/zuhyo/zuhyo01-01-01.html) (접속일: 2022.6.22).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2022.19) "「共同参画」2021年9月号" [https://www.gender.go.jp/public/kyodosanika/ku/20220609/202109\\_04.html](https://www.gender.go.jp/public/kyodosanika/ku/20220609/202109_04.html) (접속일: 2022.6.22).
- 前田健太(2019) "「女性のいない民主主義」 岩波新書" [https://www.gender.go.jp/about\\_danpo/whitepaper/03/zenta/html/zuhyo/zuhyo01-01-02.html](https://www.gender.go.jp/about_danpo/whitepaper/03/zenta/html/zuhyo/zuhyo01-01-02.html) (접속일: 2022.6.22).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2022) "丸川大臣による各政党への要請(令和3年7月～8月)" [https://www.gender.go.jp/policy/positive\\_act/kyosei\\_03\\_07.html](https://www.gender.go.jp/policy/positive_act/kyosei_03_07.html) (접속일: 2022.6.22).
- NHK(2022.6.15) "参院選計257人が立候補予定 女性候補者が過去最多の見通し"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615/k1001367306100000.html> (접속일: 2022.6.22).

2) 영어 단어 harassment에서 따온 용어로 일본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인 주로 합성어로서 끝에 '하락'을 붙여서 쓰인 예를 들어 성희롱을 뜻하는 세쿠하라(セクハラ: sexual harassment), 임신 육아로 인한 하라스먼트는 마타하(マタハラ: maternity harassment)로 표현함. 최근 '표하라(표(票)+ハラ)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나며 갑질·괴롭힘을 뜻하는 말로 일본에서 여성이나 신진 의원 같은 '정치 약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이고 함(동아일보, 2022).